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의 정명(正名)

-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의 정명(正名)

▶ 일시 : 2013.12.16 (월)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의 정명(正名)

□ 취지

용어는 개인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규정하고, 사람들은 용어를 통해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고 전파합니다. 때문에 사상과 이념과 관련된 용어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의 사회인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드리운 낙인을 벗기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심도를 높여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로 들어가 각 영역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분야별 정명(正名)>에 깊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월) 오후 2시 ~ 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 프로그램

- | | |
|------|--|
| 역사분야 | 발제: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토론: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 |
| 정치분야 | 발제: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토론: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 |
| 복지분야 | 발제: 임병인 교수(충북대 경제학과)
토론: 송원근 실장(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최승노 사무총장(자유경제원) |
| 문화분야 | 발제: 조희문 교수(인하대 영화예술학부)
토론: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과)
이문호 교수(한림대학교 경영학과) |

역사분야
발제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

한국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왜곡실상과 대책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원)

I.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국사학계의 문제는 역사는 정해진 길을 가야한다는 ‘역사발전 단계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데에 있다. 역사발전 단계론은 대개 유토피아 또는 인간 해방을 최종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함몰된 사상은 예외 없이 인간의 노예화를 보장하는 전체주의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국사학계는 ‘내재적 발전론’이니 ‘자본주의 맹아론’이니 하는 이름을 가지고 소위 “진보”를 향한 역사발전 단계론을 합리화 하는 지난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었다.¹⁾

이런 논리구조 속에서 진보니 진보세력이니 하는 허구의 개념이 생겨나고 자리를 잡았다. 진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어감을 이용하려 만든 프레임에 걸려 사회 전체가 농락되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런 긍정적 어감에 매료돼 소위 “진보”진영에 가담하면 뭔가 지적인 생각이 있어 보인다는 착각도 우리 사회에는 꽤 남아 있다. 1980년대 한국의 좌파 이론투쟁에서 공산계열, 그중에서도 NL, 그것도 가장 저급한 주사파가 승리한 것은 비극이었다. NL이나 PD 모두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진부(陳腐)한 퇴보(退步), 혹은 수구(守舊)좌파일 뿐이다.²⁾

그러나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이런 허구적 프레임에 갇혀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사학계가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쓰지 말고 대신 민주주의로 쓰자는 주장도 사실은 ‘민주주의’란 용어 앞에 무엇이든 붙일 수가 있고 그 뜻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주의적인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까지 포괄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서이다. 어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대신 모택동의 사진이 크게 실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용어혼란전술은 과거 공산주의 세력이 선동선전전에서 너무나 잘 사용해왔던 수법이다. 일례로 러시아 공산주의 역사에서 공산당 내에 레닌(Lenin)이 주도하는 볼셰비키(다수파)와 마르토프(Martov)가 주도하는 멘셰비키(소수파)가 존재했는데 볼셰비키파는 결코 다수파가 아니었다. 그러나 레닌이 당내에서 자기파가 일시적인 다수

1) 강규형,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 한국, 보수개혁의 길, 말과창조사 2012, 10-29.

2) 강규형 “종북의 계보학” 조선일보 2012.05.14.

를 점하게 되자 사용한 용어에 불과한데 이것이 굳어지면서 자연스레 레닌파는 다수파로 둔갑을 했고 아직도 역사에선 이들을 부르는 용어로 볼셰비키라고 부르는 것이다.

김명섭 교수가 한 논문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명명 전쟁(naming war)는 종종 기억의 전쟁(war of memory)으로 이어지기도 한다.³⁾ 1970.80년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이른바 종북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정상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이다. ‘6.25 남침전쟁’, ‘6.25동란(動亂)’으로 불리워 지던 것이 1980년대 이후 ‘한국전쟁’으로 통용되고 있다. 심지어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선전대로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쟁”이란 용어는 외국에서 6.25전쟁을 칭할 때 쓰는 용어였다. 그러다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전쟁이란 용어가 아예 6.25전쟁의 공식용어처럼 돼버린 것이다. 속히 다시 6.25전쟁으로 되돌아가야 할 용어이다.

마찬가지로 ‘대구민중항쟁’이니 ‘대구10월항쟁’이니 하는 용어들도 이제 다시 대구10월폭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동백림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허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시도들도 요즘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이런 오용의 사례를 시정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백림사건 때 억울한 수감자가 몇 있었고 몇몇 경우에는 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건은 본질적으로 엄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사상 용어중 대표적인 혼란용어가 ‘진보’이다.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진보라는 용어가 진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일반 대중들에게 호감을 갖는 용어임을 간파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를 ‘진보사회’, 그들의 사상을 ‘진보사상’, 이를 신봉하는 세력을 ‘진보인사’, ‘진보진영’ 등으로 지칭하여 사회주의지향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구사하는 용어혼란전술의 대표적 사례인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의 통일전선차원의 용어도 아무런 저항감없이 국내에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1970.80년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이른바 종북(從北)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정상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는 좌파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진영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지식인 및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어 자유민주진영의 언어공간마저 장악해버렸다. 이러한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왜곡을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결국 우리는 북한 및 종북세력의 용어혼란전술에 놀아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3) 김명섭,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2호 (2009), 72.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우리사회 일각에 확산되어 있는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 사용의 왜곡실태와 피해를 분석하고 이의 정상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용어혼란전술

1. 용어혼란전술의 개념

용어혼란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정에서 대중들의 지지와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 특정 용어를 실제 용도와는 달리 대중들이 호감이 가도록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구사하는 전술을 말한다.

용어혼란전술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전술의 일환이며 언어를 통한 영향공작(Influential Operation) 성격의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대중들이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어를 선점하여 사용, 전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폭력혁명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부정적 의식을 희석화시키 것이다. 즉 저항도 영향공작의 일환이다.⁴⁾

2. 북한의 용어혼란전술과 목표

북한은 선전(propaganda)과 선동(agitation)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이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기본형식』(북한 정치사전, 1985년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국내 주사파진영에서 하달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2000)이란 혁명지침서를 보면, 『대중정치교양을 통속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실과 유리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개념이나 까다롭고 복잡한 논리나, 어렵고 힘든 용어나 말투를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백한 현실 자료와 생생한 사실을 가지고 명백하고 쉬운 논리와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생활적 용어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용어사용의 중요성을 제기한바 있다.⁵⁾

국내 종북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을 구사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대중을 폭력혁명의 편으로 견인하고 혁명적 정세조성을 앞당겨 한국의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용어혼란전술을 통해 북한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통일’ 완수를 위한 유리한 혁명정세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4) 유동열, “북한 및 좌익권의 선전선동과 대응론”, 공안연구 제15권 제5호, 공안문제연구소, 2003. 139-140.

5)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북한 반제민족민주전선 발간 대남혁명지침서, 지하간행물), 2000, 146-149.

Ⅲ. 한국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의 왜곡과 폐해

1.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의 왜곡실태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친북.사회주의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용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에 대한 호칭: 남조선, 이남, 남쪽정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친북.사회주의세력)들 대한민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傀儡)’, ‘이남’, ‘남측’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일부 정치인은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정부’, ‘남측정부’라 호칭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현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면서,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나 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이러한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매국적 인식이다. 결국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산혁명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한국사회를 모순투성이의 잘못된 체제로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일하게 공산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혁명논리 전개 of 출발선상에서, 그들은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호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북’이나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국가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지지·추종하거나 혹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합법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되어 우리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인 군과 경찰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 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3) 역사관련 용어: 한국전쟁

한국 현대사 관련 용어중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왜곡된 용어가 ‘한국전쟁’(Korean War)이다. 물론 국제사회나 국제 정치학계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호칭하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6.25 남침전쟁’의 책임 소재와 성격을 실종시켜 버린 ‘한국전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⁶⁾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종북세력 등 일부 세력의 6.25 남침전쟁에 대한 시각이다. 이들은 6.25 남침전쟁에 대한 북한당국의 왜곡된 선전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국과 한국이 야합하여 도발한 북침전쟁이며 북한이 이에 대항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⁷⁾

‘6.25 남침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이러한 사실은 ① 전쟁 중에 노획된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이란 비밀문서 ② 전쟁포로들의 증언과 ③ 한국과 미국의 자료들에서도 입증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공산권 붕괴이후 밝혀진 구 소련의 비밀자료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러시아 옐친(Boris N. Yeltsin) 대통령이 제공한 6·25남침전쟁 관련 비밀문서에는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Joseph V. Stalin)이 승인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흐루쇼프(Khrushchev) 전(前) 소련공산당 서기장 회고록에서도 이를 확인해준다. 결국 구 소련 비밀문서의 공개에 따라 북침설, 좌파 수정주의학자들의 전쟁유도설, 내란확전설 등은 명백한 사실(fact) 왜곡, 역사조작임이 드러났다.⁸⁾

6) 김명섭,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2호 참고.

7)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현대조선역사, 1983. 제2편 제3장 조국해방전쟁 편 참조.

8) 강규형·캐스린 웨더스비, "소련문서를 통해 본 6·25전쟁의 기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평양," 김영호 외 6·25전쟁의 재인식: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해석, 기파랑 2010, 54-79.

둘째, 소련의 지원에 의한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려 공산화의 직전상황에서 한국이 기사회생한 것은 바로 미국과 유엔군 신속한 참전과 적극적인 지원때문 이었다. 미군 등 유엔참전국 용사 4만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부상·실종자까지 무려 154,88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⁹⁾ 우리는 6.25 남침전쟁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부름을 받고 희생당한 미군 및 참전 유엔군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해야 하며, 이들의 희생이 오늘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인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있게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국적실종의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외 해방직후 좌익분자 주도의 무장폭동인 ‘대구10월 폭동’, ‘2.7 폭동’ 등을 ‘대구민중항쟁’, ‘2.7 구국항쟁’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대표적인 역사왜곡 용어인 것이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제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4월 3일 새벽을 기해 무장봉기를 조직적으로 일으켜 무차별 살해와 방화를 해 초기의 양민 희생을 야기했다는 사실은 이견(異見)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후 군·경에 의한 과잉 진압이 진행돼 무고한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는 비극이 생겼기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 무장봉기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달삼은 북한으로 탈출해 훈장을 받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무장 공비를 이끌고 남파돼 태백산에서 활동하다 1950년 3월 토벌대에게 사살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주 4.3사건으로 표기돼야지 초기의 공산폭동까지 포괄해서 “제주 4.3민중항쟁”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¹⁰⁾

(4) 정치사상 관련 용어

북한과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방침, 범민족대회, 민족해방, 전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매우 다양하게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우리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 칭하며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차원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대남면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하에 남한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http://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406&siteId=imhc&menuUIType=sub> (검색일: 2013.8.7.)

10) 김광동·모준영·이지훈,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문제점 연구 : 鄉軍研究論文』, 在 鄉軍人會 安保問題研究所 : 國正協 事務處, 2009.; 강규형, “학자 보고서를 마녀사냥한 한국은 아직 암흑시대다,” 조선일보 2012.4.16. 참고.

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든 주민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북한적화노선에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무산자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세력’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세력으로 인정하고, 현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 및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 재야NGO, 일부 청년학생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화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민족을 앞세우며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화해세력이야 말로 북한 김정일정권과 함께 민족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반통일운동세력임을 자각해야 된다.

원래 양심수(良心囚)란 일반적으로 사상, 신념만의 이유로 투옥, 구금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정의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과 국내 사회주의세력들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친북좌익세력들과 검거간첩들인 비전향 좌익장기수를 ‘통일애국인사’ 또는 ‘양심수’로 미화하며 이들의 전면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수란 적화통일사범이며, 통일애국인사란 적화통일매국인사며, 비전향장기수는 출소공산주의인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는 아니다.

2.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의 폐해와 문제점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종북세력 등)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용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념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남’, ‘남쪽정부’, ‘미제의 식민지’라고 운운하는 행위, 사회주의(공급적으로 공산주의) 지향세력을 진보세력이라 칭하고, 용공(容共)정권을 민족자주정권,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칭하며, 사회주의지향의 용공세력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이적사범을 민주화운동세력이라고 칭하고, 적화통일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칭하는 것 등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및 국내 종북세력·사회주의혁명세력의 활동을 정당화해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념과 국가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용어의 사용을 우리사회가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결국 종북세력·사회주의혁명세력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감상적 민족공조주의와 통일지상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나 집단 및 인사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용어혼란전술은 종북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이들의 친북이적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지원역량이 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이념과 사상영역을 오염화시켜 결국 무력화하는 역기능을 확산시킨다.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은 올바른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개념규정과 사용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첫 출발점에서부터 북한 및 종북세력들의 용어혼란전술에 말려들어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국민들의 사상오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분열이 격화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등으로 양분류여 '6.15성명 지지세력=평화세력=진보세력=통일세력=민주세력=새세력'과 '6.15성명 반대세력=전쟁세력=보수세력=반통일세력=반민주세력=썩은 세력'등의 구도를 연출하여 이른바 편 가르기와 물리적 대치상황 조성으로 끊임없는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획일화된 공산주의체제와는 달리 다양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이자 우월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파전체주의(파시즘)과 좌파전체주의(공산독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용인될 수가 없다.¹¹⁾ 특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신과 의혹을 견잡을 수 없게 확산시켜 사회혼란을 양산하다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데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폐해는 안보수사기관의 대응력을 방해하고, 더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IV. 한국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 사용의 정상화방안

북한 및 국내 종북·친북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용되고 있는 정치·사상관련 용어 사용의 혼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상화방안으로 (1) 정확한 용어사용 계도 (2) 대체용어 개발 보급사용 (3) 오용되는 정치이념용어 폐기 방안을 제시한다.

11) 강규형, “선진화 시대의 역사관,” 합포문화동인회 편, 우리 시대 성찰과 전망, 도서출판 경남 2011, 493-494.

1. 정확한 용어사용 계도

북한 및 국내 종북·친북세력들에 의해 개념이 전도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저의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보’라는 용어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선점하여 왜곡,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보’라는 용어의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보’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 등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 용어가 어떻게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려줘 제대로 구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2. 대체용어 개발 및 보급 사용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에 의해 개념이 전도된 용어들을 선별하여 ‘대체용어’를 개발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3. 오용되는 용어의 폐기

북한 및 국내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개념이 전도된 용어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이를 폐기하고 이들 용어들을 먼저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언론 등 공공매체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V. 정책제언

북한 및 국내 반대한민국 세력 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용되고 있는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 사용의 혼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상화방안을 제시했다. 변질된 정치·사상 및 역사 관련 용어의 사용환경의 쇄신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1. 정부산하에 전담부서 설치운영, 계도

변질사용되고 있는 정치·사상관련 용어 사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국가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직접 정부당국이 나서 이를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제1안(국무총리실 산하 전담팀 운영)

변질된 정치사상용어를 순화, 쇄신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범국민적으로 계도할 특별팀(Task-Force)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정착될 때까지 운영

○ 제2안(교육부 산하 전담팀 운영)

교육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초·중·고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용어사용을 교육하고 확산시킴.

○ 제3안(국립국어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담팀 운영)

정부기관이 직접 나설때 일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 국책연구기관 등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범국민적 계도

2. 언론매체의 올바른 사용 권장

변질사용되고 있는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 사용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부터 올바른 용어사용을 해야 한다. 언론매체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의 도움없이는 변질된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정상적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 용어 사용을 홍보해야 한다. 이의 사례로는 ▲ TV,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출판매체 홍보 ▲ 인터넷매체를 활용 ▲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을 방송, 토론프로, 특집프로에 출연, 정당성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3. 홍보책자, 동영상자료 제작, 배포 등 대국민 홍보

정부나 관계단체에서는 변질된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실상과 올바른 사용방안을 수록한 홍보책자, 동영상CD, 해설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 사안별, 유형별로 제작, 배포하여 개선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교과서 개정 시에 이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 초·중·고 학생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정치인, 사회지도층, 교수 등 여론선도층에 대한 지원요청, 민간단체 등 NGO를 통한 자정노력 등이 요망된다.

정 치 분 야
발 제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정치용어의 정명과 한국정치의 정치실패 극복을 위한 모색¹²⁾¹³⁾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정확한 개념을 잃고 있는 개념과 용어가 상당수 있어 이를 밝히고, 바르고 정확한 사용이 무엇임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논의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론과 대중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민주화는 '복지 확충'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가 적절한 개념이자 용어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democracy'를 본래의 개념인 '다수정'으로 부르고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원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절차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지나치게 절대화하고 절대선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명칭과 바른 개념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좌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개념의 확대로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적게 할 것이다. 물론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인의 행위와 같은 현상은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브 나로드(V Narod)'운동처럼 '인민 속으로' 또는 '대중과 함께'와 같은 과거의 인민(people) 계몽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는 '포퓰리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포퓰리즘'이라는 명칭으로 '민중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바른 사용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왜곡되어 잘못 사용되는 명칭은 '보수'와 '진보'이다.

12) 본 글은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연구소,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의 정명(正名)" 세미나(2013년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발제를 위한 초고이며 보완 중임을 밝힙니다.

13) 본 글의 I-2, II장은 김인영,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개념과 한계, 그리고 미래" (한림과학원 제5회 일송학술대회, 2013년 10월 11일), 김인영, "경제민주화로는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김인영, "19대 국회에 바란다 - 국회 입법의 무거움과 과제"의 일부를 발췌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래부터 좌파가 자신들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매력 있는 용어로 보이게 하고자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착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는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일본식 용어 차입에도 원인이 있다. 양동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해방 이후 정계와 언론계가 좌-우익 중심의 정치세력 호칭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식 보수(保守)-혁신(革新) 중심의 정치세력 호칭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익을 국수주의 세력 내지는 보수 세력으로, 좌익을 혁신 세력 내지는 진보 세력으로 부르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즉, 사상적 입장으로 분명히 우익인데 보수 세력으로, 좌파인데 진보 세력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인들과 일반인에게서 모두 보수-진보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도 복지에 대하여 적극 찬성으로 복지 확대의 속도에서만 (중도)진보를 자칭하는 민주당과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가장 명확한 분야는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정도뿐이다. 대북정책에서 진보가 남북한 공존과 대북지원을 통한 관계 개선이라면, 보수는 군사적 대결의 현실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수-진보의 차이가 미미하고, 의미 없다면 이념적 측면의 문맥에서는 보수-진보 대신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그리고 행동 양식이나 가치 정향을 의미하는 문맥에서는 보수적 태도, 진보적 태도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명칭 사용과 개념 이해를 위하여 보수가 근거하고 있는 '반공'과 진보가 주장하는 '민주'는 시대의 고민을 담는 새로운 과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부연하면 아직도 '반공'인가, 아직도 '민주화'인가라는 의문이다. 즉,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인 21세기에 그리고 1987년 민주화가 되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꼴통적이며 동시에 퇴보적이다. 따라서 보수-진보 모두 새로운 아젠다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보수-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2030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탈이념적 실용성에 맞추는 대안 있는 보수-진보여야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의미이다.

I. ‘민주주의’는 ‘다수정’이다

1. 민주주의 개념의 문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승리하자, 많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자조했다. 박근혜 후보가 전체 투표 가운데 51.6%의 득표율로 1,524만여 표를 얻어 문재인 후보를 약3.6%, 108만여표 차이로 승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분노의 표시였다. 진정한 의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정(多數政)임을, 즉 다수 득표를 한 집단이 통치하는 제도이자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18대 대선결과는 무효”임을 아직도 외치고 있는 진보집단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그 어떤 세력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집권도 인정할 수 없는 제도일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절대선(絕對善)은 진보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이해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왜곡된 사용과 그릇된 이해에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바른 명칭, 즉 정명(正名)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주주의’는 놀라운 변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용어였다. 중국에서 ‘민주(民主)’는 ‘민(民)’의 주인으로 왕(王)이나 황제(皇帝)를 지칭 하던가 ‘관료(官僚)’를 의미했다. 『서경(書經)』 <다방(多方)>편의 “天惟時求民主, 乃大降顯休命於成湯”(하늘이 백성의 주인(民主)을 찾으시다가 이내 탕임금에게 분명하고 위대한 명을 크게 내리셨다.)와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종리매전(鐘離昧傳)>의 “仆爲民主, 當以法率下”(나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民主)로서, 마땅히 법률로써 아랫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다.)가 대표적인 예다.¹⁴⁾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서양의 용어들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 19세기 말~20세기 초 왕정(王政)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공화정(共和政)’(republic)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republic’이 ‘민주주의’와 ‘공화정’, ‘공화국’으로 번역되었던 것이다. ‘republic’의 번역어로서 ‘민주주의’가 포함된 이유는 당시 정치체제였던 ‘왕정(王政)’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리스 정치에 근거한다면 ‘democracy’는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 한 형태로서 ‘다수정(多數政)’ 또는 ‘민주(民主政)’ 또는 ‘민주정체(民主政體)’로 번역되는 것이 옳겠다. 나아가 ‘ism’에만 사용하는 ‘주의’(主義)를 붙인 것도 올바른 작명으로 보기는 힘들게 한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절대적 가치 내지는 절대선의 기능은 무리이거나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절차적 가치 내지는 의미를 가지는 ‘democracy’를 통치 이념이나 절대선으로 환치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포

14) 왕사오광(王紹光), 김갑수 역, 『민주사강』, 서울: 에버리치출판스, 2010, p.18에서 재인용.

플리즘 지도자에 의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 쓰였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주의에 사회와 경제를 붙여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인 ‘다수정’의 의미와 절차적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민주주의 용어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보 집단은 민주주의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생각하고,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과잉 주장되는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에는 절차적 가치와 이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이 공존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과잉이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평등의 추구가 경제민주화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는 공동체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는 운영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즉 인내와 타협의 절제된 시민정신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거나 민주주의가 최우선의 가치이니 민주주의만 되면 된다는 환상을 깨고 더 많은 인내로 더 나은 합의 방식을 찾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보비오(N. Bobbio)가 “민주주의는 요구를 표출시키는 데는 좋은 것이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나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의미 심장하다.¹⁵⁾ 최근에는 미국 의회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타협의 불발이 연방정부의 섯다운으로 이어졌다. 과거 미국이 강대국으로의 길을 갈 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때는 이러한 공화-민주의 타협은 무리 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초당적 협력의 정치(bipartisanship)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덕이자 모범이고 특징을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티파티(Tea Party) 공화당원의 등장을 문제로 삼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Obama Care) 의료보장의 과잉지출을 문제로 삼아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연방정부의 섯다운(shot down)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발생할 반복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는 중국에는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공화당-민주당의 분열과 대립의 극한정치(brinkmanship)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미국의 정치의 신뢰를 떨어 뜨려 결국 미국 국력의 한축인 소프트 파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연방정부의 섯다운이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적 방어의 신뢰를 무너뜨려 미 제국의 다운(down)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가까운 장래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가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줄 것이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다운(down)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물론 또 다른 쟁점

15) 노르베르트 보비오,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p.131.

은 오바마 케어 등을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나아가 국가부채라는 국가적 해결 과제의 부담이나 ‘출구 없음(No Exit)’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오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이든, 미국의 오바마 케어든, 한국의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든 결국 문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다.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다수에 근거한 복지 포퓰리즘은 그 목적인 ‘복지국가’가 사상누각(砂上樓閣)임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복지의 기반인 성장이 없는 복지는 빈곤의 나눔이자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의 길이 될 뿐이다. 이러한 자유 약탈적 성격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폭도들의 통치로서의 민주주의, 즉 “mob rule”이 될 뿐이다. 즉,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 출구 없음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격한 집단 간 대결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플라톤은 『국가(The Republic)』 제8권에서 통치 형태(constitution)를 명예 지배정(Timarchy), 과두정(Oligarchy), 민주정(Democracy), 참주정(Tyranny)으로 나누었다. 명예 지배정은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현대에는 유사한 형태를 찾기 힘들다. 참주정은 민주정이 타락한 경우 나타나는 무질서와 분열로 생겨나는 반동적인 형태의 극단적인 1인 권위주의 정치체제이다. 참주정은 개인통치(personal rule)로 개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자신의 실정을 감추고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전쟁과 대외적 위기를 필요로 한다.¹⁶⁾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 정치가 보여준 부자와 빈자의 정치적 갈등과 당파 싸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개탄했다. 따라서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철인 통치자의 필요였다. 물론 철인통치의 대척점에는 민주통치가 존재한다. 민주 체제에 대한 플라톤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민주체제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네. 이 체제가 발전하다보면 사람들은 세 부류의 계급으로 나뉘네. 우선 가장 힘이 강해 멋대로 날뛰는 계급이 있네. 이들은 파벌을 지어 최대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 다음으론 부자들의 계급이 있는데, 이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 항상 재물을 모으지. 그렇긴 하지만 수벌(지배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이네. 자신이 모은 꿀을 뺏기는 자들이지. 마지막으로 민중으로 분류되는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도 별로 없어 손수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네. 이들은 돈도 권력도 없지만 힘을 합치면 무서운 세력이 되지.

아데이만토스 그렇습니다. 그러나 꿀을 분배 받는 한 그들은 힘을 합치려 들지 않겠

16) 이환, “역자서문”, 플라톤, 『국가(The Republic)』, pp.148-49. 결과적 형태로만 본다면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가족 통치이자 개인통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남북한 갈등 조성권 전쟁, 그리고 대외적 위기 강조의 정치와 일치한다.

죠.

소크라테스 그렇네. 그들은 늘 꿀을 얻어먹네. 지배자들이 부자들로부터 꿀을 얻어먹네. 지배자들이 부자들로부터 꿀을 빼앗아 이들에게 주거든. 그래서 부자들은 늘 불만에 싸여 자위책을 세우기에 골몰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벌과 결탁한 민중이 무서워 눈치를 보곤 하네. 하지만 이런 구도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걸세. 수벌의 착취에 시달리던 부자들은 과거의 과두체제를 그리워하며 변혁을 모색하고, 이를 핑계로 소위 민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과 결탁하게 되지. 참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네.

아데이만토스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이제 참주 체제의 국가에 대해 알아보세. 참주의 등장은 자못 화려하네. 그는 민중의 지지를 업고 등극한 군주처럼 행세하면서 누구에게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친절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며 자신이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애쓰네. 빛도 탕감해주고 토지도 분배하면서 민중들을 안심시키지. 또 제거해야 할 정적과 화해할 동지를 구분해 때로는 싸움을, 때로는 선동을 획책하며 민중이 늘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네.¹⁷⁾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플라톤이 민주통치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대중)이 공동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인데 문제를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할 만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장의 비유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식론적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둘째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대중이 선출하는 경우 민주적 선거과정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에 맞추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중적 지도자는 자신을 ‘대중의 친구’임을 공언하며 공동체를 위해 최선인 것을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다수를 위한 정치적 결정은 소수 부자들의 반발로 공동체가 갈등과 반목, 대결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플라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결국 국가의 중대사를 대중이라는 다수의 변덕에 맡기는 체제로 신뢰할 수 없었다.¹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통치자의 수와 정부형태에 따라 아래의 6개로 구분하였다.

17) 플라톤, 이환 편역, 『국가(The Republic)』, pp.237-38.

18)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서울: 문학과학사, 1997, pp.49-50.

<표-1> 그리스 정치질서(헌법: politeia)의 분류

통치자의 수(Rule by)	이상적 형태(Ideal Type)	타락한 형태(Degenerative form)
일인(one)	왕정(Kingship)	폭군정(Tyranny)
소수(few)	귀족정(Oligarchy)	과두정(Oligarchy)
다수(many)	혼합정(Polity)	민주정(Democracy)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유기적 생명체로 이해하여 생겨나고 죽으며 안정과 불안정을 오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적 형태의 안정된 정치체제와 타락한 형태의 불안정한 정치체제의 구분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 여부로 되었다. 첫 번째 조건은 최선의 사람들(aristoi)이 통치하느냐 여부, 두 번째 조건은 통치의 목적이 공동체 전체 또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것(ariston)이냐의 여부였다. 즉 이상적 통치형태는 1인이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관계없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경우로써 이를 올바른 정치질서(right constitution)로 명칭 하였다.¹⁹⁾ 민주주의는 타락한 형태의 정치형태로서 다수의 통치자가 자신들만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폭도들의 통치(mob rule)와 다르지 않는 저급한 정치로 보았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대척점에는 혼합정(polity)이 위치했다. 왕정, 귀족정, 다수정이 혼합된 통치 형태로 다수에 의한 정치가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했다.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직접 보자.

22....민주정치의 첫째 변형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엄밀하게 추종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변형에 있어서는 **법에 의하여 평등은 빈자가 부자와 마찬가지로이며, 양측이 모두 균등하고, 둘 중의 어느 하나도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3....즉,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꼭 같이 정치적 권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질서는 민주정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민은 다수이고, 다수의 의사가 최고 권위이기 때문이다.**

26. 법을 준수하는 민주정치에서는 대중 선동가는 없다. 여기에서는 시민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국정을 맡아 본다. **대중 선동가들은 법률이 최고 권위를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이 독재가가 되는 것이다 - 즉 많은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독재체를 이루는데 - 다수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최고 권위를 행사한다.**

27....이러한 종류의 민주정치는 독재자의 성격을 띠며,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이

1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3권 제7장.

아니므로 곧 독재정치를 하려고 든다, 그것은 정치가 점차로 독재적이 되어가며, 아침꾼이 명예를 갖게 되고, 1인이 통치하는 폭군정치 형태에 유사하게 된다.

28....민주정치에 있어 대중 지도자는 폭군정치에 있어서 아침꾼과 마찬가지로 아니며 아니면 적어도 그와 비슷하다. 양쪽 경우에 모두 총애를 받는 자들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된다- 즉 폭군정치에 있어서는 아침꾼이, 이것의 변형인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대중 지도자가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9. 대중 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결정에 돌림으로써, 법치의 지배를 법령의 지배로 대처해 버리고 만 것이다. 일단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하고 나면, 대중 지도자들이 자신이 국민의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대중은 그저 그들의 지도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대중 선동가들의 위차기 튼튼해지는 것이다.²⁰⁾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하여 그리스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경계했던 이유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빈자들의 정치, 혼란한 정치로 그리고 공익을 지키기 어려운 정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올바른 정치체제(right constitution)과 잘못된 정치체제(wrong constitution)의 구분은 일인(一人)이든, 소수(小數)이든, 다수(多數)이든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public interest, common interest)를 위하여 통치를 하느냐 여부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현대 정치가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선출된 최고의 통치자가 존재하고, 권력이 특정 엘리트들에게 나뉘어 있지만, 결국 주권은 국민에게 존재하여 수시로 통치자와 통치 엘리트를 바꾸는 체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통치를 담당할 정치집단, 또는 관료, 또는 경제 엘리트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통치냐의 여부이고, 나아가 그 공익 여부를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느냐의 여부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처럼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남용과 오용 그리고 과도한 기대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민주주의 대신 '폴리아키'(polyarchy) 또는 '다두정'라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데 아무 때나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두정'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달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었고 많은 정치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다두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다원사회 내지는 민주정치의 현실태라고 하겠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이해는 탁월하다. 슈페터의 민주주의 정리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과 미래 방향을 명확히 밝혀내고 있다. 슈페터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경쟁을 사장의 경쟁 작동에 비유하

20)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4권 제4장.

였다. 투표자는 소비자처럼 경쟁하는 정치인(기업가)들이 제공한 공약내지는 정책(생산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여기서 정당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동업자조직(trade association)처럼 경쟁을 조절하고 제한한다. 정치적으로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선거기간) 새로이 정책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거에 구입한 정책(생산물, 물건)을 평가한다. 핵심은 경쟁적 정치 시장이다. 만일 여러 가지 규제로 정치시장의 경쟁이 위축된다면, 그리고 소비자가 경쟁을 통제한다면, 질 좋은 정책(상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핵심은 경쟁의 존재이다.

숨페터의 민주주의는 3불론(不諭)에 근거한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더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적절하고 결정적인 해답이 될 수 없으며, 둘째, 그러한 공공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 셋째, 설령 공공선을 인지한다하더라도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의사는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위의 엘리트들의 선거 경쟁을 통한 발견한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후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에 의해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애로우 정리로 다시 증명 된다.²¹⁾ 애로우는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le Theorem)를 통해 구성원의 선호집계 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숨페터의 첫 번째 불가론을 증명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증가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모든 병폐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참여민주주의자, 민주주의를 시장 경제에 도입하여 경쟁을 죽여 평등을 달성하려는 경제민주화, 경제적 기반은 무시하고 복지의 확대만을 주장하는 복지주의자(사회민주주의)들은 보비오(Norberto Bobbio)가 언급하는 '상상 속의 민주주의(imaginary democracy)'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²²⁾

2. 민주주의 다양화의 문제: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지나친 확대·강조는 민주주의의 부정, 즉 빈자에 의한 전제정치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보비오의 민주주의 이념 규정이다.²³⁾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므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논리의 문제이다. 즉, 다수가 법치 위에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대는 광장에 모인 자신들이 국민 전체를 의미하고 대변한다는 의식이었다. 즉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정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하였다. 과연 집회참가자가 전체

21) 서병훈, “‘국민에 대한 거역’? -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2009.

22) Norberto Bobbio, *Liberalism and Democracy*, New York: Verso, 1990, p.129.

23) 윤형식, “토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사회와 철학』, 제4호, 2002, p.201.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시위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았던 참가하지 않거나 못했던 진정한 다수는 결정에서 제외될 수 없는 법치였었다. 즉 시위 참여자에 의한 민주주의는 법치 위에 있지 않았다. 즉,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상위 개념이 아니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경제민주화도 모순된 개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에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견해이다. 경제 문제를 다수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운동이자 이념이다. 그래서 경제다수정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된다. 대기업이나 기업조직의 운영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원래의 뜻인 것이다. 회사경영을 주주단과 CEO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가 한국에 와서는 경제계에서의 평등, 즉 대기업을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존시키겠다는 이념으로 변질되었다. 경제 주체 간에 평등한 대우내지는 평등을 실천하겠다는 또는 경제의 다수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수인 대기업 관계에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다른 영역임을 간과하는 문제점에 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계약관계이므로 공적인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사적영역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불균형의 관계이고 강탈의 관계라고 사고하는 인식의 문제도 심각하다. 즉, 계약관계가 평등이나 불평등이냐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역시 균형 관계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불균형'이 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진정한 균형관계로 인식될 수 있겠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송복 교수가 제시한 '적불균형' 개념을 원용한다면 적절한 불균형에 의해 유지된다.²⁴⁾ 그 불균형이 적절하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고, 지나치면 경쟁을 삼켜버리고 획일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교정을 위해 시장의 경쟁에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민주주의가 가진 빈자들을 위한 정치, 빈자들의 요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으로의 성격 때문에 시장의 왜곡,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적절한 평등성과 적절한 효율성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절한 불균형이 사회통합의 바람직한 대안이 되듯이, 적절한 평등성과 적절한 효율성의 추구는 시장과 정치의 적절한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적절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시의 경제의 상황과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 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대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적절히 조절되고, 대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긴밀히 연결됨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대중 민주주의는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가 선동정치가가 주도를 잡게 되면 참주정치로 타락한다

24) 송복, "통합의 본질은 적불균형(適不均衡),"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

고 했다. 이러한 시각은 밀(J.S. Mill)의 『자유론(*On Liberty*)』과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도 교육 받은 남자 유산자 계급을 넘어 서는 빈민의 참여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가져옴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²⁵⁾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극단적 작용에 관해서도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파괴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적이다. 그 최고의 한계치까지 실현하게 되는 민주주의는 종당에 자유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이다. 즉 국가가 무분별하게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 민주주의의 하나의 가치인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목적인 자유를 파괴하고 산술적 평등을 달성하여 노력할 뿐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 다수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근대에 출현한 산업 부르주아 또는 신흥 자본가들에게 국왕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는 논리와 이념으로써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출현하였고 자유주의 이념을 위해 다수정(민주주의)이 필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한된 민주주의는 시민과 노동자를 포함하는 보편투표에 의한 민주주의로 변화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시민이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이어야 한다. 여기서 하이예크(Friedrich von Hayek)의 설명은 명쾌하고 적절하다. 즉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 의사결정 방식일 뿐이며, 정치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과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자인, 즉 주인인 정치체제란 설명과 그다지 충돌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며, 주권자란, 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주권의 행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등의 과거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주권자로서의 ‘민주’와 정치적 ‘평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와 정치경제적 평등의 실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 하겠지만 *Economist*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자유’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결함 또는 결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그러하듯이 민주주의는 ‘자유’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절대군주로부터 부르주아(시민)의 자유 확보가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영국과 유럽의 의회민주주의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 근원이 다른 부분은 전자가 국왕의 전제로부터 종교적 자유, 신체적 자유, 소유권의 보장을 통한 자유인의 탄생을 가져왔다면 후자는 그리스 정치와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자유인에 한정되었던 점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고, 미군은 일본이 철수한 점령지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

25) 파리드 자카리아, 나상원 외 역, 『자유와 미래』, 서울: 민음사, 2004, p.399.

였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 형성 과정에서 자유 투쟁의 역사가 일천하였다. 군부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도 투쟁은 ‘민주화’였지 ‘자유화’는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다. 이미 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었고, 정부의 통제가 심한 경제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 투사들의 실수도 있었던 것이 군부 권위주의 통치의 전복에만 관심을 가졌었지 ‘자유’의 확보와 자유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6·25전쟁 이후 권위주의 정권들이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반공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에게 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세력의 논리였다. 따라서 지금도 일부 좌파/진보 세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지칭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불러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세력, 군부세력,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정치제도였으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사회민주주의’나 ‘대중민주주의’이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과 정착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극히 한국적 상황에서 벌어진 자유주의의 왜곡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그것도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그린이나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이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부의 전통으로 고전적 자유도 확보한 적이 없는 역사에서 군부 통치 밀어내려고 ‘민주화’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고 규정하였다. 자카리아는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Foreign Affairs, Nov/Dec 1997)와 『자유와 미래(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2003)에서 자유주의의 기반 없이 선거라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집권한 나치 정권이나 중남미 정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사례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 가고 있으나 ‘자유주의’가 뒤따르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실패해서 “자유화 독재국가”(liberalizing autocracies)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민주화 되었으나 종교, 언론의 자유 확보와 같은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큰 틀로 지칭하고 있다.

자카리아는 한국의 경우 1997년 글에서는 대만, 태국 등과 같이 “자유주의적 반쪽 민주주의 국가”(liberal semi-democracy)로 분류하였다. 민주화 수준보다 자유화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였다.²⁶⁾ 즉,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추진으로 평등은 이루고 있으나 대신 규제의 강화로 경제활동의 자유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달리 시민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 보장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시장(free-market)에 근거한 견고한 경제체제와 견제와 균형에 근거한 건전한 정치제도의

26)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Nov/Dec 1997, p.27.

건설이 필요하다. 특히 소유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경제자유화와 시민적 덕성, 즉 관용과 자제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자카리아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적극 수용하는 민주주의에서 경제 자유화를 포함한 자유주의의 발흥을 보기는 쉬울 것 같지 않다.²⁷⁾ 과거 박정희 권위주의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의 성취가 가능했으나, 현재의 경제 부분조차도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화된 민주주의를 가지고서는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유주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²⁸⁾

나아가 민주주의에 근거하였으나 절제되지 않은 대중의 참여 요구로 만들어지는 정치의 과잉과 무분별한 대중의 요구에 표를 의식하여 타협하여 만들어진 재정 지출 등이 만들어낸 대중주의는 모두 정치실패에 해당한다. 남부 유럽 그리스와 스페인, 남미 대륙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 등이 보여준 대중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실패는 복지 성공 사례인 스웨덴만 모델로 삼는 우리에게 정치 실패의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걸려 20,000달러 소득에 도달한 우리가 진심으로 남부 유럽이나 남미의 정치 실패의 국가에 속하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40,000달러 이상인 북구의 정치 선진국에 속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II.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대중영합주의이다

1. 포퓰리즘은 대중주의다

선거에 의해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다수정(민주주의)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대중적 인기와 다수의 여론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정은 언제나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변질되기 쉽다.²⁹⁾ 문제는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 확인 방식이 투표라면 정치지도자들은 인민(people)의 표를 매입(買入, purchase)하기 위해 다양한 무리한 약속(公約)을 제시할 것이다. 다수정(민주주의)에서는 그 무리한 약속이 공동체에 가져올 영향이 나쁘다 할지라도 다수가 결정하거나 자유의 구속이라도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27) 자카리아(Zakaria)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Constitutional liberalism has led to democracy, but democracy does not seem to bring constitutional liberalism."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Nov/Dec 1997, p.28.

28)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유럽식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을 의미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그린이나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포함하지 않는다.

29) 최정욱,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비교민주주의 연구』, 제5권 1호, 2009, p.68.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어의에 충실 한다면 ‘people’(대중)이 중심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의 의사가 중심이 되는, 대중(people)에 영합하는 정치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법(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대중(大衆)이 결정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정당화 되는 정치, 그리고 야심적인 정치지도자가 대중의 의사를 조작하여 대중의 정치적 지지와 후원을 얻어내는 정치질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중주의(民衆主義)나 대중주의라는 한글 번역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대중에 영합하고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영합주의”라는 번역이나 포퓰리즘이라는 원어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가능하다.

그러면 포퓰리즘과 포퓰리즘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정치인의 말이나 공약에서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들에게 복지 혜택을 남발하느냐 여부, 또는 대중의 지지 확보를 위한 선동적인 구호나 공약이 있느냐 없느냐여부이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은 필수적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적’ 대중영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엘리트가 대중의 지지를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엘리트 독재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포퓰리즘은 엘리트가 대중의 심리에 영합한다는 측면과 대중이 엘리트의 선동을 추종한다는 두 측면이 함께 한다. 엘리트와 대중이 영합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로 포장된 독재에의 영합으로 귀결된다.

최근 ‘좌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개념의 확대로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적게 할 것이다. 물론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인의 행위와 같은 현상은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브 나로드(V Narod)’운동처럼 ‘인민 속으로’ 또는 ‘대중과 함께’와 같은 과거의 인민(people) 계몽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는 ‘포퓰리즘’ 또는 ‘대중주의’,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

포퓰리즘을 표방한 정부에서는 다수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 독재(mass dictatorship)로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치적 소외(political alienation)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결

정이 대중의 요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political diversity)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왜곡되고,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가 억압된다.

포퓰리즘은 사회 통합보다는 사회 분열로 이끈다. 포퓰리즘은 보통 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희생양으로 삼게 되고, 그 때문에 원래 목표로 하는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먼 사회 불안과 균열을 결과하게 되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은 대부분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대기업(재벌)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엘리트와 대중, 무상급식 반대자와 찬성자, 학교 체벌 찬성자와 반대자 등을 구분하고 전자는 강자(强者), 후자는 약자(弱者)로 구분하고 약자의 정서에 호소하는 선동성을 가진다. 강자는 악(惡)이고 약자는 선(善)이라는 단순 논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단순 논리의 이분법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갖게 되지만 사회는 분열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3. 한국의 포퓰리즘 정책들

포퓰리즘 정책은 거의 대개 ‘인민의 주권 회복’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복지정책과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정치적 선동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기업-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의 변형으로 중소기업보호하지만 대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정책인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등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이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료급식을 제공하던가, 소득에 따라 급식비용 지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적절함에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지지를 목적으로 보편적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 역시 대학 교육보다 더욱 중요한 초중고의 완전한 무상교육은 제쳐두고 대학등록금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종부세’는 부유층을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역시 포퓰리즘 정책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시장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규제를 양산하여 우리 경제를 죽이고 그 속에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의 확충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현실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양산은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현재 경제가 권위주의 독재적인 상태라는 인식, 즉 한국 경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전제는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에도 국회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여야합의에 의한 처리라는 수사적 명분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입법부를 견제할 어떠한 장치나 세력 또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권위주의적 입법 내지는 입법독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포퓰리즘의 결과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Peronism)와 그리스의 국가재정 위기 등 세계 정치사의 많은 예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의 결과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극심한 정치 분열, 그리고 계층 간 대립의 악화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 감소,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복지혜택 부담증가로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포퓰리즘 정책은 최근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결과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복지혜택의 증가가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선동하지만, 대중은 곧 이어 초래될 정부 부채의 증가와 재정 악화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렇게 포퓰리즘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대중을 선동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고, 기업 규제와 과도한 분배정책으로 자유 시장(free market) 경제 질서를 해치게 된다. 정리하자면 포퓰리즘 정치는 ‘서민’이라는 약자를 위하여 아주 힘센 강자(정부나 국가)가 다른 중간 강자(대기업)를 ‘대중(서민)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people) 내지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democracy) 벌하는 정치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중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와 권위주의 대중독재(popular dictatorship)를 실행하는 모순을 낳는 것이다.

5. 포퓰리즘의 대안으로서 자유주의 정책

포퓰리즘은 다수 대중의 집단 의사를 강조하고 또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확립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다수 대중 집단의 강제가 가져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대중 독재의 가능성, 그리고 국가 재정의 고갈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결국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확립이 주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중요하다.

자유(自由, liberty)만큼 중요한 가치로 평등(平等, equality)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 없는 평등은 숨 막히는 공산사회였다. 정의(正義, justice) 역시 평등만큼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 없이 정의로워 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의의 실천을 위해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적 정의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불평등이 곧 정의롭지 못함은 아니다.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면 바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기회의 평등은 자유가 보

장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울 때,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평등적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도 그 목적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와 같이 자유가 되어야 한다. 왜 민주인가? 자유를 위해서인 것이다. 시장도 중요한 것은 계획 시장이 아니라 자유 시장이다. 자유로워야 시장은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Ⅲ. 보수와 진보는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

1. 보수-진보 개념의 무정형성(無定型性)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이념대립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그리고 IT혁명의 시대에도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과 대결 프레임(frame)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진보진영에게 보수는 ‘완고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보수진영에 진보란 ‘대안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고정화된 이미지 만들기과 상대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진보 모두 19세기내지는 20세기적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지진아’일 뿐이다.³⁰⁾

즉, 한국에서 보수-진보라는 명칭은 우파-좌파의 이념적 명칭 대신 잘못 붙여져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정명(正名)이 아니기에 개념의 불명확성과 자기모순적 오류를 내재하게 되었다. 좌파는 해방 이후 좌파 이데올로기를 탈색하여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하여, 6·25 전쟁 이후에는 ‘반공(反共)’을 국시로 삼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파-우파 대신 진보-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한 것이 관행적(慣行的)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 언론과 정치권이 극우를 보수로, 극좌를 진보로 표기한 일본식 용어를 분별하게 도입하여 사용하여 고착시킨 데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보수-진보의 명칭보다는 우파-좌파라는 원래(原來) 개념이 맞는 용어이겠지만 그 동안 보수-진보가 우파-좌파를 대신하여 사용되어온 사회적 관례와 탈냉전·탈이데올로기 시대에 더 이상 좌파-우파의 이념으로 명확히 정의기 힘든 무수한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진보적 태도’라는 구분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편이성에 근거하여 ‘보수-진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왜 서로 상극인가? 많은 학자와 평론가들이 지적하듯이 대화 부재와 토론의 부재 탓인가? 본인은 대화와 토론의 부재를 떠나 보수-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분법적 프레이밍(framing) 자체가 역사와 현실태

30) 김일영, “한국 보수에게 미래는 있는가?”,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p.212.

(現實態)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설명력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수-진보의 갈등과 대결이 자신의 분석과 해결 방법만이 옳다는 독선주의(獨善主義)적 주장이고, 둘 가운데 하나를 없애고 자신만 존재케 하고 싶다는 유아독존(唯我獨尊)적 태도라면 그것은 극단주의(極端主義)이며 전체주의(全體主義)적 방식이다. 종합하면 보수-진보는 단순화된 이분법(二分法)적 사고이자 태도이지만 다원적이며 통합적이며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공존하는 관계, 즉 '경쟁적 동반자'의 관계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이건 사회민주주의이건 보수와 진보 모두 다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호 공존적인 태도는 필요하며, 집단 간의 절제된 경쟁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보수-진보의 독선적 태도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대표적인 예로 보수 또는 우파는 6·25 한국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반공'을 표방하였으나 '반공'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등 많은 진보적 가치를 파괴하고 훼손하였다. 문제는 탈냉전의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지금도 '보수'='반공'으로 인식되는 보수성을 지켜왔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적 보수가 아니라 생활의 '보수꼴통'이 되어 버린 태도의 경직성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진보'보다 수세적 입장에 있어왔다. 누가 '보수'를 '진보'보다 좋아할 수 있겠는가. '보수'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프리미엄을 가지고 출발한 진보는 '말 진보', '입 진보'라는 일반 대중의 비아냥과 비판에서 보듯이 '대안 없는 비판'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부정', 그리고 역사적 퇴행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정치체제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행동은 없고 말 뿐이고, 대안은 없고 비판뿐이고, 일부 진보 집단의 경우 '친북'(親北)을 넘어 '종북'(從北)으로, 진보가 진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병리적 현상은 치료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질병(疾病) 내지는 암(癌)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국의 보수-진보 개념은 과거부터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서양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일본과 중국을 통하여 수입하여 내재화 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북한과의 대결하며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과 동서 냉전의 상황에서 좌파 이데올로기를 탈색하여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작용했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은 이승만과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념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정치적 상황에서 좌파 대신 진보라는 명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극우를 보수로, 우익을 중도보수로, 극좌를 진보로 표기한 일본식 호칭과 용어 사용법이 당시 일본에서 교육 받은 인사들과 언론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정착하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³¹⁾

해방 직후에도 좌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 서구의 매력적인 개념을 도입한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의도적으로 '진보'와 '민주주의'를 선점하여 사용하며 자

31) 양동안, 『사상과 언어』, 파주: 북앤애플, 2011, pp.38-39.

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초기에는 대중에게 긍정적이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서양식 용어를 차용한 듯하고, 이후 국제적 냉전이 심화되자 ‘빨갱이’ 색깔공세를 피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보수라는 명칭도 보수가 스스로 사용했다라기 보다는 좌파가 우파의 이념을 폄하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언어 사용에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보수는 ‘정체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보수는 수세적 위치에 처해있었다. 그리고 ‘진보’는 용어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적 가치와 ‘발전’내지는 ‘나아짐’을 원하는 인간 본성의 요구에 맞추는 특성 때문에 보수보다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언론과 학계가 진보의 대립 개념으로 ‘퇴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명칭 사용이 보수-진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즉, 진보의 경우 진보가 개념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에서의 진보란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보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진보 환경론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지만 신중하게 잘 관리하여 가난한 계층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진보는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냐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진보’ 개념의 근원적 모호성내지 모순성을 의미한다.³²⁾

‘보수’와 ‘진보’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는 모호함을 뒤로 하고, 보수-진보가 추구하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국사회 진보는 민주, 개혁, 노동, 인권, 환경을, 보수는 권위주의,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는 정체가 불분명하고, 보수의 권위주의와 자유주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짝이다. 즉, 이념적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³⁾ 결국 무엇을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가, 무엇을 발전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대상과 내용, 방식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뒤엎고 상호 모순된 보수-진보 개념을 폐기하고 좌-우 개념이나, 우파-좌파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즉, 보수-진보라는 명칭보다는 우파-좌파라는 원래 명칭이 맞겠지만 그 동안 보수-진보로 사용되어온 사회적 관례와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이념과 연계되기 힘든 사안들이 등장했음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현재 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보수-진보 개념의 사용을 인정할 필요 역시 존재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와 진보-보수는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그리며 상당한 교집합을 교차하

32) 신중섭,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사상적 측면," 현진권 편,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한국경제연구원, 2013, p.44.

33)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p.46.

고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좌-우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진보는 좌파를 보수는 우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⁴⁾

2.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보수와 진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가 2012년 12월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는 33.2%, 진보는 28.7%, 중도는 31.8%, 모름/무응답은 6.3%로 조사되었다.³⁵⁾ 비슷한 시기에 현대 리서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는 37.5%, 진보는 21.2%, 중도는 36.0%, 잘 모름은 5.3%로 조사되었다. 1년전 보다 보수는 8.7% 늘고, 진보는 6.8% 줄어들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가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20~40대의 ‘진보이탈’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민층 응답자 가운데 진보가 22.2%로 보수라 34% 응답에 비해 12%나 적은 비율이다. 빈민층 응답자의 경우 보수가 45.8%, 진보가 20.3%로 서민층-빈민층의 경제적 상황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³⁶⁾ 강남좌파, 강남진보가 출현하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투표 현상을 보이는 것 역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상황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표본 집단이 작기 때문인지 동일한 시기의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의미 있는 보수-진보 시계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03년 6월과 2013년 4월의 여론 조사 결과 비교분석에 따르면 진보성향 응답자 중 “한미동맹 강화하자”는 여론이 10년 사이 29%에서 62%로, 보수성향 응답자 중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년 전 33.9%에서 47.6%로 늘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반미, 반복 논란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정치정향 또는 의견이 일정한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비슷하게 “탈미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1.7%에서 24.0%로, 중도 성향에서는 15.4%에서 12.8%로, 보수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11.9%에서 11.0%로 각각 줄었다. 2003년의 정치적 상황 즉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고와 이어진 대선에서 친미-자주 대결의 구도로 형성되었던 정치상황이 변화하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새로이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시대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수-진보층은 변화하며, 최근에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중간층, 즉 친북진보(좌파), 반복진보(좌파), 반복보수(우파), 친북보수(우파)로 나뉘어 이념집단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34) 김호기, “한국 대표적 지식인의 사상적 원류,” 『신동아』, 2001년 10월호, p.326.

35) 『동아일보』, 2013년 1월 1일.

36) 인홍욱, “1년전 보다 보수 8.7%p 늘고 진보 6.8% 줄어...이념 지형 우클릭,” 『경향신문』, 2013년 1월 1일.

더욱 주목할 사안은 최근까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 이슈였는데³⁷⁾ 이제는 그것도 흐려져 중도내지는 중간/모순층이 상당한 정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의 구분의 하나로 과거에는 복지지원의 이슈였는데 최근 대선에서 여야가 복지에 합의하면서 복지예산 증가 필요에 대하여는 모두 증가로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없어지고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와 대상의 폭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보수-진보를 구분하는 잣대가 더욱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명확한 보수-진보의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다면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접근 역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못한 구분법이 될 것이고 불분명한 보수-진보 구분을 근거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것, 역시 소모적이며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적 재산권을 강조했던 자유주의 사상은 당시에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고(思考)였지만,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자유주의는 보수적인 사고이자 태도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19세기와 20세기의 보수-진보는 21세기의 보수-진보와 동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시대가 원하는 보수-진보의 의미로 재정립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미미하고, 불명확하고, 정치적인 차이

그 동안 행해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과 같은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차이가 미미했다.³⁸⁾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보수-진보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작고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결은 극단적이고 치열했다. 이념적 차이나 정책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비하하다 보니 보수-진보의 갈등이 격화된 양상으로 나타는 것이다. 최장집은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구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들여다본다면 “없는 차이에 근거한 허구이거나 이데올로기적 규정” 뿐이라고 분석한다.³⁹⁾

이는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의 정체성 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과 정부 통제의 의도를 드러내었고, IMF의 관리통제를 적극 수용하면서 ‘빅딜정책’과 ‘규제강화’로 재벌 통제를 시도하였다. 때문에 노동계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부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재

37) 최근까지 북한에 관하여 진보는 유연한 태도, 보수는 강경한 태도를 통일에 관하여 진보는 남북한 공존 및 교육 후 통일을, 보수는 흡수통일과 비핵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김일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위상: ‘뉴라이트’, ‘뉴레프트’,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연구』, 제 100집, 2006, p.36.

38) 장덕진,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39) 최장집,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3(개정판), p.47.

게로부터는 규제강화와 강제 빅딜에 전념하는 ‘규제국가’로 외면당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겉으로는 대기업과 거리를 두는 모양을 갖추었지만 삼성이 참여 정부의 두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 제출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11개 분과별, 5년 국정과제와 동일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전자의 진대제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인재를 공유했다. 중앙일보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재 교류의 정점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미 FTA를 한-칠레 FTA에 이어 추진하게 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동계와 갈등을 증폭시켰다.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로 (농담처럼) 규정한 것은 한국 사회 진보-좌파의 대표적 정부의 모순된 모습이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초기의 친기업적이 정책과 민영화 추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광우병 촛불 시위로 위기를 겪은 직후 바로 뒤로 물리고 ‘동반성장’ 정책과 물가관리, ‘자본의 책임과 공생발전’을 통한 공정사회 건설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개입정부의 모습을 보이며 보수 신자유주의에서 멀어졌다.⁴⁰⁾ 즉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몰두하며, 친재벌·친기업적이고 노동억압에 노동 배제 정책을 서슴없이 행하고, 보수정부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와 동반성장 정책으로 친서민·친중소 기업을 천명하는 모순과 혼란을 보여줌으로서 한국사회 보수-진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보수-진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은 특히 보수-진보 구분이 불분명하다.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이 재벌의 이익을 대표하고, 민주당(과거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때문에 이들 정당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의 정체성 불분명은 한국 정치의 특징일 것이다.⁴¹⁾ 즉,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하여 중간으로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학계와 시민사회 역시 정치화 되어 아직도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4. 보수-진보의 몰역사성(沒歷史性)

한국사회 보수와 진보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보수-진보 모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정책 등을 제시하는 시대 현실 적응에 실패하고 있음을

40) 김인영, “한국의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의 변화와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2호, 2008; 김인영,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비교민주주의연구』, 제7집, 2호, 2011; 김인영, “발전국가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1호, 2013.

41) 최장집,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p.47.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 특히 강정인은 보수-진보가 정치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자리매김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 역사에서 ‘보수주의’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 산업화,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에 대한 반발로 출현하였지만 시대마다 전통과 기존질서가 달라짐에 따라 그 보수(保守)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화하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라는 장소적 상이함이 보수주의의 편차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⁴²⁾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모두가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적이며 반동성을 가지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예를 들면 진보진영의 일부이겠지만 아직도 한국을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하는 종속국가로 보고 싶어 하는 제3세계(the Third World) 신드롬에 빠져 있다. FTA 체결 이야기만 나오면 국가적 이해득실 관계는 제쳐두고 한국을 제3세계의 한 국가로 규정하고 ‘경제 종속’을 들먹인다. 나아가 항미(抗美)와 반미(反美) 전선의 주요 논리가 되어 버린다. 한마디로, 아직도 ‘종속’인가? 아직도 한국을 제3세계로 보고 싶어 하는 진보의 ‘제3세계적 세계관’ 고착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이석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좌파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주의적 극좌에 대해 아직도 온정적이라는 사실은 진보의 정체성 혼란과 몰역사성을 보여줄 뿐이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촛불시위에 대해 반공 단체들의 반대 시위에 의존하고, 북한의 도발적 태도에 대하여 ‘반공’ 이외의 반대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의 반공이 이제 탈냉전을 지나 탈이데올로기를 언급하는 시대에도 논리의 중심에 반공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적이며 반동(反動)에 가깝다. 한마디로, 아직도 ‘반공’인가?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과 몰역사성, 반동성과 관련하여 최장집은 보수의 ‘지적(知的) 빈곤,’ 내지는 ‘이념적 빈곤’을 지적한다. 보수세력이 세계화 시대도 지나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도 냉전적 가치관에 묶여 새로운 세대의 가치와 이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반면 박세일은 “우리 사회에 정서적인 진보는 많은데 정책적 진보는 약하다.” 진보세력의 선동적 구호가 결국 좌파 포퓰리즘이 되어 한국사회를 나락(那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비판한다.⁴³⁾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정권에 보수 정책, 보수 정권에 진보정책을 추진하는 모순된 모습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동일하게 이명박 정부까지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수-진보가 20세기 세계화와 정보화에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하여 결국 보수-진보의 정체성 혼동을 결과하였다. 미국의 경우 보수세력은 낙태문제에 대하여 친생명(Pro-Life)로 대응하고,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에 대하여 ‘티파티’라는 조직

42) 강정인, “한국보수의 비교사적 특징: 서구와 비교,”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p.39.

43) 최장집·박세일, “진보에게는 보수의 현실을, 보수에게는 진보의 시각을,” 이창곤 편,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서울: 밭, 2010, pp.263-4.

으로 감세와 정부와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진화하였다. 물론 한국사회 민주화 이후 정권들이 보이는 진보-보수적 성격의 복합정체성(mixed identity)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는 변화하지 않은 채 정책만 상대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 국민의 지지는 낮게 되고 결국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됨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5. 오직 ‘반공(反共)’으로와 변함없는 ‘친일파 대 빨갱이’, ‘독재 대 민주’의 이분법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는 진보는 거의 사회주의내지는 좌파적 이념주의자를 의미했다. 반면에 당시 보수는 반공을 이념으로 한 체제 수호세력이었다. 하지만 1960~80년대에 와서는 한국의 보수-진보의 구분은 반공이나 좌파적 이념보다는 근대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나로 구분이 가능했다. 권위주의를 인정하고 완고하고 부패한 보수와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지지하는 젊은 비판 세력으로서의 진보 개념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문제는 1987년 민주화의 성공과 1989년 동구 공산권과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 그리고 전세계적인 사회주의의 쇠락이었다. 민주화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한국사회 민주-반민주의 대결이 무의미해지고,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반공이나 좌파적 이념이나의 대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진보는 자기반성이나 쇄신 없이 지금 21세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는 점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보수는 반공을, 진보는 민주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사안을 진단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결국 북한 때문이며, 친북·공산주의자의 문제로 귀착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보수는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반공’이라는 부정 의식과 반대 행위 이외에는 분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가 보수해야 할 가치가 ‘반공’과 보안법이라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너무 초라하고 빈약한 보수다. 때문에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이념화 하려하였지만 한국에는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하고 과거 자유민주주의가 ‘반공’과 동일시된 전력 때문에 세력화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6·25 전쟁의 영향으로 체제 수호를 위하여 ‘반공’이 국시(國是)라고 인정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반공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반공의 강조에 보수집단이 앞장을 섰었고 이를 원인으로 보수와 반공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보수가 반동인가?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 국한된 현상일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 군사적 대결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자리 잡았고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의 종식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20년 넘게 지속되었음에도 보수는 여전히 ‘반공’을 강조하고 있다. ‘반공(反共)’이 ‘반동(反動)’이 되어버린 시절이 되었음에도 보수는 반공을 아직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강조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수집단의 집회라고 하는 모임에는 퇴역군인들과 해

병대 전우회, 월남전파병 동호회 등 많은 반공과 관련된 전쟁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보수집단 구성원의 문제는 진보가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도 심각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진보는 한국사회 보수에 대한 모든 비판을 민주주의와 민주화로 답하고 있다. 진보는 민주주의를 확장하여 사회 정의의 문제나 복지 문제를 사회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로 환치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진보가 아직도 '민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거이다. 사회민주화는 사회정의의 실현 문제이고,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의나 경제적 평등의 확보의 문제일 뿐이다. 진보가 굳이 '민주화',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사회의 정의를 논해야 하는 상황은 진보가 과거 정의롭지 못했음 때문이다. 진보가 정의롭지 못했던 또 다른 예는 북한의 권력승계, 북한 인권, 북한 핵에 관한 이슈에서이다. 진보는 북한에 대하여는 민주화는커녕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인권 문제나 민주화 문제에서 진보와 진보 시민단체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사적 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용인하고 이해하는 태도 때문에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문제는 2030 세대의 경우 과거 보수-진보의 대립구도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친일파 대 빨갱이', '독재 대 민주'의 이분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시대적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이분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보 모두 '친일파' '빨갱이', '독재정권', '민주화'를 넘어서는 프레임과 아젠다를 제시해야 2030 신세대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욱.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2010년 9월.
- 강신욱·이현주·김석호.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강정인. “한국보수의 비교사적 특징: 서구와 비교.”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 김경희.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2009.
- 김원식.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철학연구회. 『진보와 보수』. 서울: 이학사. 2002.
- 김인영. “발전국가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1호. 2013.
- 김인영.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비교민주주의연구』. 제7집, 2호. 2011.
- 김인영. “한국의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의 변화와 특질.”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2호. 2008.
-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2008.
- 김인영. “통합은 좋고 분열은 나쁜가?”.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
- 김일영. “한국 보수에게 미래는 있는가: 네오콘(뉴라이트)의 종언과 프로콘의 등장을 기대하며.”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 김일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위상: ‘뉴라이트’, ‘뉴레프트’,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연구』. 제100집. 2006.
- 김호기. “한국 대표적 지식인의 사상적 원류.” 『신동아』. 2001년 10월.
- 노대명·강신욱·전지현.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
- 노석조. “한국민주주의 지수, 처음으로 미국 추월.” 『조선일보』. 2013년 3월 22일.
- 박준. “한국 사회갈등 현 주소.” 한국경제연구원.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자료집. 2013.
- 박준·김용기·이동원·김선빈.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No. 710. 2009.
- 박지향.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의 길.”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
- 박지향. “국민통합 토론문.”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토론회: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료집. 2013.
- 백낙청·안병직.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이창곤 편.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

- 다』. 서울: 민. 2010.
- 사회철학연구회. 『진보와 보수』. 서울: 이학사. 2002.
- 사회통합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0.
- 사회통합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보고: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 2010.
- 사회통합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보고: 사회통합 정책과제 보고서』. 2010.
- 사회통합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0.
- 사회통합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1.
- 사회통합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1.
- 사회통합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1.
- 사회통합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1.
-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2.
- 사회통합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2.
- 사회통합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보고: 보고자료』. 2012.
- 서병훈. “‘국민에 대한 거역’? -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 『정치사상연구』. 제 15집 1호. 2009.
-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
- 송복. “통합의 본질은 적불균형(適不均衡).”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
- 송호근. “유럽 사회통합 이끈 ‘교양 시민(공동체 배려·사회윤리 갖춘 중산층)’…한국도 적극 키워야.” 『조선일보』, 2010년 11월 30일.
- 송호근.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좌우 진영 논리를 넘어』. 파주: 다산북스. 2012.
- 신중섭. “사회통합과 자유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국민통합 제2차 정책토론회: 국민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료집. 2013a.
- 신중섭. “외칠수록 멀어지는 ‘사회통합.’”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b.
- 신중섭. “이제 사회통합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 송복 편저.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오션. 2013c.
- 신중섭.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사상적 측면.” 현진권 편.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한국경제연구원. 2013d.
- 양동안. 『사상과 언어』. 파주: 북앤피플. 2011.
- 윤평중. “‘정의란 무엇인가’ 신드롬의 담론분석과 공정한 사회.” 사회통합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편. 『한국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2012.
- 이영조. “사회통합 담론의 등장과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국민통합 제2차 정책토론회: 국민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료집. 2013.
- 이창근 편.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서울: 민. 2010.
- 인홍욱. “1년전 보다 보수 8.7%p 늘고 진보 6.8% 줄어...이념 지형 우클릭.” 『경향신문』 2013년 1월 1일.
- 장덕진.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 조희연. “‘정치지체’와 낙천·낙선운동.” 『창작과 비평』 107호(2000년 3월).

- 주대환. “한국 진보에게 미래는 있는가?”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 최장집.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2013.
- 최장집·박세일. “진보에게는 보수의 현실을, 보수에게는 진보의 시각을.” 이창곤 편.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서울: 민. 2010.
- 최정욱.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비교 민주주의 연구』. 제5권 1호. 2009.
-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미래학회·좋은정책포럼 공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서울: 나남. 2010.
- 현진권. “왜, 사회통합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 2012년 7월 5일.
- 홍윤기.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사회철학연구회. 『진보와 보수』. 서울: 이학사. 2002.
- Bobbio, Norberto. *Liberalism and Democracy*. Verso. 1990. (노르베르토 보비오.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시성. 1992.)
- Giddens, Anthony and Christopher Pierson. *Conversation with Anthony Giddens*. London: Polity Press. 1998. (앤소니 기든스·크리스토퍼 피어슨. 김형식 역. 『기든스와 의 대화』. 서울: 21세기북스. 1998.)
- Rifkin, Jeremy.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the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Tarcher. 2004. (제레미 리프킨. 이원기 역. 『유러피언 드림』. 서울: 민음사. 2005.)
- Zakaria, Fareed.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자카리아, 나상원 외 역. 『자유와 미래』. 서울: 민음사. 2004.)

복 지 분 야
발 제

임 병 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분야 용어의 정명(正名) 연구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복지 분야의 일부 용어의 사용 현황 등을 논의하고 그 용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바른 용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복지 분야의 많은 용어들을 조사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바른 용어(正名)로 전환해보았다. ‘복지수요’는 ‘복지욕구’로, ‘복지투자’는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 투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로, ‘무상’시리즈는 무상 대신에 ‘국가’나 ‘정부’, 또는 ‘세금’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으로,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비거주지입원’, ‘불법(또는 부당) 거주’, ‘요양병원 거주’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I. 연구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인간의 위대함은 ‘말’(언어)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1차적으로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말’을 형상화시켜 ‘글’(문자)로 남겼다는 점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칭호를 붙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특정 사물이나 추상적인 관념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사물의 존재와 관념을 공유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점차 집단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생기자 해당 객체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명칭으로 삼고자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개체가 위치한 장소에서 특정 개체를 지칭하여 설명하거나 해당 관념이 공유되는 상황에서는 함께 한 사람들간에 명칭이나 관념의 공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술한 상황과는 다르게 특정 개체가 없거나 관념에 대하여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부터 우리 인간사회에 용어의 통일성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가 갈파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명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인간들이 함께 사는 한, 인간을 포함하여 사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언어를 이용한 명칭부여(naming) 작업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명칭 부여 뒤에는 해당 객체를 ‘존재’로서 증명하려면 기록에 사용한 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실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용어 정의 외에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도 언어로서 정의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침략받지 않으려면 침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전 부족민들이 그 의미를 알고 인식해야 지도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통솔하고 해당 부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된 용어에는 사물에 대한 정의보다도 오히려 추상적인 정의 또는 용어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언어로써 자연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언어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창조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신중섭, 2013, p. 13). 따라서 언어가 인간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공유,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서 행동을 바뀌어 자기와 유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사체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집단들이 정당과 최근 많이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심지어 언어구조, 어순에 따라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서양과 동양의 의식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은 익히 아는 바이다. 더 나아가 동일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연령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가지기 때문에 바른 용어 사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젊은 세대가 노년층과 달리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조사결과에서 확인된다(장후석, 2013).⁴⁴⁾

이상의 논리에 근거할 때, 우리의 인식과 의식을 결정하는 언어에 의한 존재의 규

정, 즉 용어의 정의가 잘못될 경우 자칫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행동도 그에 근거하여 바뀌면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바른 용어, 즉 정명(正名)운동이 각종 용어와 개념 규정에서 혼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어를 왜곡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각에서 최근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련 용어 중에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복지관련 용어들은 없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복지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일부를 바르게 정의하여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복지분야가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정착 복지수혜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관련 용어를 바르게 규정하고(正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복지분야의 용어가 그릇되게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에 기초한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순응여부가 오도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대한 방향설정 등에도 영향을 주어 정부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수혜자들, 곧 국민들의 행동은 물론 국가의 기능 또는 역할, 더 나아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증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는 몇몇 용어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문적인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정명 관련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정명대상 용어들의 사용현황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상세한 논의를 해본다. 4장에서는 사용현황 등을 구글검색결과 등을 이용하여 살펴본 뒤, 올바른 용어를 제시하면서 그 논리를 상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정명 관련 기존 연구와 기호학

정명과 관련된 연구로는 최근에 몇몇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44) 장후석(2013)은 선호 복지 형태나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함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혔다. 그는 이 인식 차이가 복지와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51.6%와 55.0%가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27.4%만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복지 형태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선택적 복지 선호 비율이 58.9%인 반면, 50대 이상은 74.8%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시장경제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서 보듯이 그 동안 간간이 논의만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발표된 연구로 신중섭(2013), 김이석(2013) 등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명운동이 실제로 이름짓기(naming)라는 점에서 이와 밀접한 학문분야인 기호학 또는 언어학 등의 저작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주제와 같이 사회 복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바르게 규정하려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참고로 기호학 등에서는 이름짓기(naming)와 관련한 7원칙 또는 8원칙 등이 있어 작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 그림, 지표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논의와 관련이 깊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호학에서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행위를 의미작용(signification), 의미작용과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communication(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이 둘을 합하여 기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용어를 자신들의 의도가 담기도록 명명한 뒤, 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회자시킴으로써 정치적 견해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묶어 집단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그것이 정부라 할지라도-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역시 의미작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기호작용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차이가 역사적으로 많은 정당이 실재하고 활동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Ⅲ. 정명대상 용어의 사용현황

1. 복지수요

먼저 복지수요라는 용어에 대하여 논의한다.⁴⁵⁾ 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에 따르면 복지(福祉)는 ‘행복한 삶’이라고, 수요(需要)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대사전의 두 가지 용어에 대한 낱말 풀이를 연계해보면, 복지, 즉 행복한 삶을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용어사전(<http://s.hankyung.com/dic>)(이하 경제용어사

45) 구글코리아에서 ‘복지수요’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약 4,400,000개 (0.23초)”라는 문장이 나타날 정도(2013.11.30.기준)로 복지수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복지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를 비롯하여 복지와 수요가 따로 구분되어 검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복지수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전)에서는 수요는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계획)를 수요(demand)라고 하며, 이는 필요와는 달리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연관시킨 개념으로서 일정기간에 걸쳐 측정되므로 유량개념(등록일: 2013/05/1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복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수요라는 용어가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기사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만 나열해본다.⁴⁶⁾

- "**복지 수요** 증가..지방 재정건전성 우려" (000, 2013. 11. 26)
- 늘어나는 **복지 수요**.. "국고기준보조를 개편하자" (000, 2013. 11. 14)
 - “만성화된 재정적자,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채무 급증 우려”(000경제, 2013.11.96)
 - 경제부총리,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 ... 깔고 가되 이제는 민간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00신문, 2013. 11. 26)
 - 내년엔 복지 수요 감당에 나랏빚 1인당 1000만원 넘어(2013.09.28.)

2. 복지투자

국어대사전에서는 투자(投資)라는 용어가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제품의 재고 따위의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등.

경제용어사전에서는 다양한 투자에 관한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가까운 용어가 “순투자, 자본적 투자(등록일 : 2012/12/17)”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순투자는 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수명이 당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정자산 투자에 돈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즉, 회사가 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질자산을 구입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 셈”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투자라는 용어가 게재되고 있는 신문 기사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부총리, "내년 **복지투자** 100조 돌파할 것"(000, 2013. 9. 15)
- 000위원장, "정부는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000, 2013.5.10.)

46) 구글의 뉴스기사 검색에서도 약 11,900개 (0.23초)의 검색결과(2013.11.30.기준)가 복지수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보험 사각지대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용어 중 사회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질병이나 노령, 근로 능력의 상실 따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네 종류가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 사업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용어사전에서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민영보험과 달리 대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 명시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인데 이를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고 정의한다.

한편, 사각지대(死角地帶)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군사용어로서 무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더 및 관측자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⁷⁾

참고로 사각지대는 영어로는 blind spot인데, “현재 상황 또는 여건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지역의 일부를 지칭”(A part of an area that cannot be directly observed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in free encyclopedia)한다.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연구원 과제 제목과 기사들을 몇 개 사례로 제시해본다.⁴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 한국노동연구원
- 임시직·농어업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000, 2013. 11. 19)
- 직장인 10명 중 3명 사회보험 사각지대(000, 2013. 11. 24)

47)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를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약 1,830,000개 (0.36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11.30. 기준). 관련 언론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사…65% “폭행 경험””(2013. 9. 6).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아동 41만 명 달해”(2012. 10. 18) 등이 있다.

48) 사회보험사각지대라는 용어를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약 324,000개 (0.35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11.30. 기준)

4. 무상시리즈: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교육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상(無償)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급식은 식사를 공급함. 또는 그 식사”, “의료는 의술로 병을 고침. 또는 그런 일”, “보육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름”,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급식>

- 3곳 제외 경기도 전 시·군 내년 유·초·중 **무상급식**(2013년 11월 28일)
- 경남 인턴교사 500여명 내년부터 교단에 못 선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내년도 인턴교사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 이 탓에 학습보조 370명을 비롯한 예술교육 24명, 과학실험 60명, 산학협력 36명, 보건 27명...(2013년 11월 28일)

<무상의료>

-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00뉴스-2011. 2. 21)
- 진주의료원 폐업한 경남도, '**무상의료**' 약속 파기?(2013. 11. 19)

<무상보육>

-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확보 비상...562억 부족(00일보, 2013.11.30.)
- 서울시 '내년 예산' 24.5조...또 빚내서 **무상보육**?(000, 2013. 11. 6)

<무상교육>

- 고교 **무상교육** 연기 '예산부족 탓'(00뉴스, 2013. 9. 26)
- 반값등록금 예산 삭감... 고교 **무상교육**은 유보(00뉴스, 2013. 10. 6)⁴⁹⁾

5. 사회적 입원

사회적 입원이란 용어는 국립국어연구원과 경제용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신조어이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정의를 찾아보면, “사회적 입원이란 병원을 집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적 요인에 의하여 입원하기 보다는 환경적, 사회적, 가족적 요인에 의해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⁵⁰⁾ 또 다른 정의로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49) 무상급식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약 3,850,000개, 무상의료 약 610,000개, 무상보육 약 7,040,000개, 무상교육 약 1,280,000개 등이 검색되었다.

들어도 가족문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입원을 하는 것”이 있다.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기사 제목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줄줄 새는 의료급여, 정부가 근본처방 내놓아야(000, 2013. 1. 7),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이 일반환자 입원보다 4.7배나 많은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입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 경기도, **사회적 입원**으로 의료재정 악화(000, 2013. 6. 17), “병원을 치료가 아닌 생활공간으로 삼은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면서 지방 의료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IV. 정명제안과 그 논리

1. '복지수요'에서 '복지욕구'로

복지수요라는 용어의 기본적인 문제는 전술하였듯이 행복한 삶을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있다. 과연 행복한 삶을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행복이 수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할 것이다.

복지수요라는 용어에서 결국 복지를 구입하기 위한 가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물론 조세가격(tax price)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만 보면 마치 복지수요라는 용어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복지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임에도 복지수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가 단지 경제적인 측면을 지원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불과함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복지수요는 복지욕구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의 뜻인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볼 수 있고, 또한 국어 대사전에서 '욕구'를 찾아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에서 '복지욕구'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 재미있는 검색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복지욕구'라는 용어가 나오는 언론기사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

50) 중앙일보 기사(2013.4.22.)에서는 “<전략>...감사원이 최근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사회적 입원' 환자가 3만1075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입원이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의료적 처치가 거의 없어 병원이 집과 거의 다름없다는 게 감사원의 진단이다....<후략>”

다는 것이다. 참고로 관련 검색어로 사회복지욕구, 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욕구조사 등이 함께 검색되었다. 그리고 상당한 연구에서 ‘복지욕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일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복지욕구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 - 한국장애인복지관

2. ‘복지투자’에서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 투입’으로

전술한 국어대사전과 경제용어 사전의 두 정의를 연계해보면, 복지를 투자라는 용어와 연계시킬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사회적인 입장에서 복지를 투자와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간접자본이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주체가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지만, 국가의 자본 stock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도움을 주어 미래의 이윤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복지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투자라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생긴 소비여력의 부족에 처한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국가경제의 소비 저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또한 민간부문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매출액을 전반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하거나 매출액 감소를 예방하게 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의 상당부분은 시설 건립 또는 장비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실물투자와 같은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가 결합되어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마치 투자인 것처럼 간주되어 복지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가 곧 투자라는 논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이전지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복지투자라는 용어는 복지재원 투입,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 복지지출 등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에 복지재원 투입이라는 용어를 검색한 결과를 보면, 복지욕구라는 용어와 달리 언론기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검색되고 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금·의료복지 투입재원, 예상치의 2배 될 듯(000, 2013. 1. 10)

- 135조 이외 추가 복지재원 투입 없다…재정건전성이 중요(00일보, 2013. 2. 2)

한편, 복지지출로 검색한 결과는 연구주제를 비롯한 언론기사에서도 다양하게 검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재원 투입,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 복지지출이라는 용어 중에서 복지지출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보험 미적용자’ 또는 ‘사회보험 적용제외자’로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배제하고자 하지 않았음에도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전에는 대부분이 사각지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사각지대라는 용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프로그램 또는 사회보험과 같은 각종 제도에 의한 사업에서 해당 프로그램 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도 다른 용어로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논의해본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이어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4대 사회보험체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그럼에도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 많은 연구 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된 이병희(2011)로써 상세히 논의해본다.⁵¹⁾ 이병희(2011)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제도적 사각지대),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무불이행 또는 보험료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실질적 사각지대),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수혜의 사각지대),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보장의 사각지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이들 4개 유형이 과연 사각지대인지를 임병인(2013)을 인용하여 판단해본다. 임병인(2013)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에도 해당 사회보험이 책임져야 할 고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다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각지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2항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51) 이하 내용은 임병인(2012)에서 발췌, 인용하면서 내용을 추가 서술한 것이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실질적 사각지대는 보험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적 사각지대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없다.⁵²⁾ 수혜의 사각지대는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 등이 해당된다. 이는 민간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당연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장의 사각지대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각지대로 규정할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빈곤에 노출되는 계층이나 실업급여에서 수급기간이 3개월인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장의 사각지대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수혜금액이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를 납입했고 또한 그에 따라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리에 근거할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보험 미적용지대’ 또는 해당자를 중심으로 하면 ‘사회보험 미적용자’ 또는 ‘사회보험 적용제외자’로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왜 사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지, 적용대상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각지대라는 용어에서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당연히 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고 사료된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2012)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그에 속하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복지소외계층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는 제도적 결함에 놓여있는 계층으로 명백한 사회복지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사회보장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복지욕구가 미해결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소외라는 것이 정부가 마치 의도하는 것같은 인식을 주고 있으므로, 미적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미적용지대’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2) 제도적 사각지대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 특수고용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을 말한다.

4. ‘무상’이 아닌 ‘국가’나 ‘정부’, 또는 ‘세금’으로

전술하였지만, 무상(無償)이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상시리즈라고 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부담하지 않지만 (물론 학생들조차 어떤 품목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함), 학생들의 부모들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전혀 맞지 않음을 아주 사소한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붙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그 조세가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아니면 소득세이든 소비세이든 세금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무상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유의할 것은 비록 필요에 따라 정부 예산(세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은 현재와 같이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국가급식’ 또는 ‘정부급식’, ‘공적 급식’,⁵³⁾ 무상의료는 ‘국가보장의료’, 무상보육 역시 ‘국가보육’ 또는 ‘정부보육’, ‘국가지원보육’ 등과 같은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세금”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사회적 입원’이 아닌 ‘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비거주지 입원’, ‘불법(또는 부당)거주’, ‘요양병원 거주’으로

신조어인 사회적 입원은 입원한 병원이 집이 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불편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난립된 요양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병상을 채우려다보니 장기간 입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자-가족-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되었지만, 요양병원에 무작정 입원하고 있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이 집과 거의 다름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의료와 복지 욕구 중 복지욕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사회적 입

53) 국가급식보다는 정부급식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이유는 국가급식은 마치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급식, 정부급식, 또는 공적급식 등으로 할 경우, 가정급식이라는 의미에 대비되어 국민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생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을 거절하는 요양병원이 있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여 병원입장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 자체로는 누구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을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주체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용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보통 입원이란 환자들이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의료처치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아무런 의료 처치없이 병원을 집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입원으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무연고거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무연고인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기되면 국민들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에 의해 가지는 해당자들에게 대한 인식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는 마치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지는 형태인 것으로 여겨지나, 요양병원 무연고거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입원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연고도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한 뜻이 전달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현상이 부당함을 강조하여 ‘부당한 요양병원 거주’ 또는 ‘부당(불법) 거주’ 등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복지 분야의 일부 용어의 사용 현황 등을 논의하고 그 용어에 대한 대안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제시하였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복지 분야의 많은 용어들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의 바른 용어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복지수요’는 ‘복지욕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투자’라는 용어는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 투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로, ‘무상’시리즈는 무상 대신에 ‘국가’나 ‘정부’, 또는 ‘세금’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으로, 최신의 신조어인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비거주지입원’, ‘불법(또는 부당)거주’, ‘요양병원 거주’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바른 용어 명세>

이전 용어	바른 용어
복지수요	복지 욕구
복지투자	복지 지출 또는 복지재원 투입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 미적용지대
무상시리즈	국가..., 정부..., 세금..
사회적 입원	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비거주지입원, 불법(또는 부당)거주, 요양병원 거주

참 고 문 헌

- 김이석,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경제학적 측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3-03, 2013.4
- 신중섭,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사상적 측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3-03, 2013.4
- 이병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방안”, 월간 노동리뷰, 2011, 11, 한국노동연구원, pp.5-28
- 임병인,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년 재정네트워크 working paper, 2013. 1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대사전
- 사회복지용어사전, 사회복지사협회
-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용어사전
- 장후석,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20-30대는 복지 불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13-15(통권 525 호), 현대경제연구원.2013.5.13.

문 화 분 야
발 제

조 희 문
(인하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문화분야 용어의 정명(正名)연구

조희문 (인하대 영화예술학부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역량이 존중되는 곳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좌파 세력 내에서는 창의적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념 선전을 위한 수단화와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집체 훈련만이 강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지만 극단적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세력들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이용한 이념화, 조직화, 세력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념과 명분은 전략과 전술로 위장한 채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인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한다. 문화·예술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비해 연성적이며, 이미지의 효과는 지속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법조, 언론, 안보 등 각 분야는 문화·예술과 쉽게 접목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일수록 문화, 예술 분야를 중요한 선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에 집착하는 것은 그 효과와 영향력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들을 살펴본다.

용 어	개 념 과 사 용	대체용어	비 고
문화	문화는 일상생활의 품격을 높이며 인간적 존중을 확산하기 위한 일체의 현상 또는 활동을 가리키지만 좌파적 이념으로는 북한식 선동과 이념교육을 고양하기 위한 일체의 현상과 활동을 가리킨다.	선전기반환경	
예술	예술 역시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두어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는 일체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가리키지만 사회주의적 선동 개념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이념 선전과 일체화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을 뜻한다.	문화선전활동	
문화제(촛불, 희망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춤과 노래, 그림, 영상 등을 이용해 벌이는 선동 퍼포먼스. 촛불 시위장, 노동집회장 등 각종 시위 현장에서 벌이는 공연 형태의 프로그램에 ‘촛불문화제’ ‘희망문화제’ 등의 이름을 붙인다.	시위현장공연	
민족예술	부족, 집단 등 특정한 단위의 동질적 표현과 성과물의 총체를 뜻하지만 근현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는 외세와 분단을 부정하는 자주적 예술활동의 일체를 가리킨다.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적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집체의식화	

<p>민중예술</p>	<p>예술활동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규정한다. 고급한 예술 활동을 권력자, 지배계층의 추종물로 인식하며 다수의 대중이 생산하는 예술적 활동을 민중예술이라고 주장한다. 계급적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p>	<p>기층선동</p>	
<p>문화권리</p>	<p>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평등적 보호와 향유를 권리의 대상으로 본다. 이때의 문화는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와 연계한다.</p>	<p>문화투쟁</p>	
<p>문화민주주의</p>	<p>문화의 향유와 분배를 평등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는 개념. 자본주의 문화 환경 내에서는 문화적 계급화와 소외가 심해지고 이는 부당한 차별과 비인격화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p>	<p>문화배급</p>	
<p>문화연대</p>	<p>각 문화 세력들 간의 연대를 통한 조직화, 기지화, 세력화를 위한 활동.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억압과 착취, 왜곡의 과정으로 평가하며 문화관점으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문화세력연대</p>	
<p>문화다양성</p>	<p>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교류를 뜻하지만 제국주의적 외세문화의 침탈로부터 특정한 권역의 문화를 지켜낸다는 개념을 담는다. 개방과 교류를 신자유주의적 문화침탈이라고 주장한다.</p>	<p>자주문화</p>	

국제연대	반미와 반외세적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세력화를 확대하기 위한 전술적 조직화.	외세동원조직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좌파문화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거나 전복하기 위한 활동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수단이며, ‘표현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선동의 자유	
독립영화	‘독립영화’는 미국의 ‘Independent Film’ ‘Indie Film’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상업권 영화와 구분되는 저예산, 실험, 다큐 등 다양한 영화를 아우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운동적 성향을 더 강조한다. ‘독립영화’라는 용어가 특정한 계층, 단체의 영화적 성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다.	인디필름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취지는 보호와 육성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질적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 개방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성장과는 무관하게 반미 선동의 명분으로 동원되어 정치적 도구화 했다.	강제상영	

역사교육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 개입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미국의 조종하에 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다는 주장.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	대한민국 지우기	
참교육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북한체제를 숭배하는 이념교육을 확장하려는 일체의 시도.	이념학습	
체험학습	근.현대의 역사적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왕조 체제를 체험, 찬양, 학습하기위한 시도.	선동체험교육	
희망버스	각종 시위 현장에 외부 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는 전술적 시도. 시위의 의도, 명분,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한 선동적 명분으로 '희망' '평화' 등의 간판을 붙인다.	기동조직단 (시위지원단)	

